

“내란 혐의자에 대한 기준 제시…역사 정의 실현”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 반응

광주 시민사회 “내란 공범 인정한 판결…환영” 일부 단체 “2·3심 감형, 정치적 사면 절대 안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자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12·3 계엄과 내란에 대해 사법부가 확고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시민사회의 평가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놴. 노동계는 “내란 공범에게 당연한 선고”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은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한 점은

12·3 계엄이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에 해당한다는 첫 사법적 판단이자, 내란에 가담한 국무위원에 대해 내려진 첫 유죄 판결이다”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를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했고,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절차를 형식적으로 갖추게 함으로써 내란을 가능하게 한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결론이다”고 평가했다.

손상옥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위원장도 “한 전 총리는 당시 국무총리이자 행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해 통제·견제할 책임이 있었다”며 “12·3 계엄과 내란에 대해 사법부가 확고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윤복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이번 판결은 12·3 내란에 대한 역사적 단죄를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며 “판결이 향후 관련자 재판에서도 타협 없는 무관용의 기준점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내란 세력이 완전히 청산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부 단체는 역사적 단죄를 강조하며 아쉬웠다는 의견을 내놴.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책임 회피, 거짓말

을 일삼은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의결 정족수를 가능하게끔 역할을 했다”며 “전두환·노태우씨 선고 사례처럼 사형, 무기징역 선고를 통해 이런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재판부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판결을 내렸지만 내란에 사회적 의미를 고려할 때 사형 또는 무기징역과 같은 형벌이 내려져야 했다”며 “2~3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면 안 되고, 정치적 사면 역시 절대로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



고니 가족의 휴식 21일 영산강 상류지역인 광주 북구 신용동 일대에서 한 무리의 고니(천연기념물 201호) 가족이 강 위에서 유유히 이동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고니는 순수 우리말이며, 백조라 불리기도 한다. 11월 말 러시아 캅카스에서 날아와 지난해 3월 중순에 다시 돌아간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염전업자 올린 ‘전과 23범’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약 7000포대의 소금 판매 사기 범죄를 저지른 전과 23범이 또다시 교도소를 가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재성 재판장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업자들을 속여 20kg들이 소금 6900여포대를 가로채는 등 각종 사기로 5억4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업자들에게 소금을 납품하면 한 달 내로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A씨는 대금을 지급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순천시민연대 “반도체 국가산단 순천 지정해야”

“광양만권 산업구조 전환 실질적 해법” 강조

순천시민연대가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지지하며 RE100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순천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순천시민연대는 21일 오전 10시 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과정에서 전남 동부권이 소외되는 안 된다”며 “통합의 실질적 성과로 순천이 RE100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300명은 반도체 산업이 막대한 전력 수요와 안정적인 용수 공급, 전문 인력이 장기간 정주할 수 있는 도시 여건을 동시에 요구하는 국가 핵심

전략산업임을 강조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기존 반도체 산업 구조는 전력·용수 부족과 RE100 달성의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순천은 전남권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주암댐과 상사댐을 통해 깨끗하고 풍부한 산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의료·주거·문화 인프라가 고르게 갖춰진 정주 여건 역시 경쟁력으로 꼽았다.

또 인근 산업단지와 항만, 철도, 고속도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물류 체계

와 산업 확장이 가능한 부지 확보 여건 등도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충분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순천시민연대는 “RE100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순천 유치에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성과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사업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균형 성장을 이끄는 전략적 선택”이라며 “철강·화학 산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광양만권 산업구조 전환의 실질적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연대는 향후에도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 전반에 시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견 표명과 공론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피부미용업 위장 신·변종 성매매 업소 적발

광산경찰, 업주 등 6명 입건

피부미용업소로 위장해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온 업주와 종업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광산경찰청은 21일 아파트 밀집 지역 상가에서 피부미용업으로 위장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업주 A씨와 20대 실장 B씨, 여종업원 4명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외형상 피부미용·건전마사지 업소로 위장한 뒤 사무실 내부에 침대와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예약제 방식으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성인 정보 사이트에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로 광고를 게시하고 여종업원 사진과 프로필, 업소 연락처 등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신분 인증 절차를 거친 남성 손님들 상대로 성매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광산구 일대에서 건전마사지를 방자한 대형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번 단속을 통해 기존 마사지 업소와는 다른 피부미용업 형태의 신·변종 성매매 수법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불법 성매매 운영에 사용된 영업용 PC 본체와 휴대전화(일명 토폴), 범죄수익금 136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밀집 지역 상가를 중심으로 업종을 위장한 신·변종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 침해와 각종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성매매에 대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상승 차량 방화범 징역 3년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불특정 다수의 차량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져.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재성 재판장은 일반자동차 방화 및 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

A씨는 2025년 8월20일 밤부터 이

튄날 새벽까지 광주 남구 일대 교회와 주택가, 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4대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 가운데 2대는 불이 옮겨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으나, 나머지 2대는 각각 시가 500만원과 1813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돼.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2월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고문의 062)370-7070
구독문의 062)370-7080

뉴스는 진실이어야 합니다!

거짓 없는 보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
광남일보를 구독해 주세요

